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157호 (2012-38) 발행일 : 2012. 09. 21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지난 2000년 이후 외국인여성과의 국제결혼 증가는 혼인시장의 불균형으로 인한 인구 구조적 현상으로, 국내외 인구환경의 변화로 중장기적으로 혼인이주여성의 유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혼인이주여성의 출신국 변화, 혼인형태 다양화, 생애과정 진전, 자녀의 증가 등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혼인이주자와 다문화가족들의 변화는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생시키게 될 것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젊은신부' 프레임을 바탕으로 '적응지원'의 관점에서 진행 되어 왔으나, 앞으로 '정착지원'의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이상림 부연구위원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황과 특성

- 2011년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2만9천8백건으로 전체 혼인에서 9.0%를 차지하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혼인이주자들은 2012년 기준 약 22.0만 명이고(여성은 19.7만 명), 혼인이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37.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다문화가족 지원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과 같은 정책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정책이 전달되는 정책지원 체계가 설립되어 있음
-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의 핵심적 정책 수행 부서인 여성가족부는 혼인이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 단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업이 초기 정착 단계 혼인이주자들에 맞춰져 있음

〈표 1〉 여성가족부의 단계별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1단계	입국 전 결혼준비기
	1.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
2단계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1.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2.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3.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3단계	자녀양육 및 정착기
	1.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 교육 지원
4단계	역량 강화기
	1. 결혼이민자의 경제 · 사회적 자립 지원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핵심적 정책전달체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전국 20개소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부터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현재 전국 159개소 설립(서울시 19개소, 부산 7개소, 경기 24개소 등 도시지역에도 빠른 증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 문화교육, 가족교육 · 상담, 다문화가족 아동양육 지원, 임신 · 출산 지도 서비스, 직업교육 및 다문화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관련 기관들과 연계한 사업을 운영

〈표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 사업

구분	사업내용(목적, 대상, 내용 등)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의 언어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국어 교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생활 조기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양육지원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통해 아동양육 능력제고를 통한 가족통합 지원
임신 · 출산 지도 서비스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 산전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단기간의 출산 전후 서비스 제공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현재 진행 중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혼인-입국-출산-양육-자립 등 가족의 생애과정을 반영하는 정책 프레임틀을 기초로 '초기 적응지원'에 집중하는 경향

○ 혼인이주여성들이 출산기에 있는 '젊은 신부' 들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정책접근

○ 이주자 유입의 초기 단계에 적합한 정책 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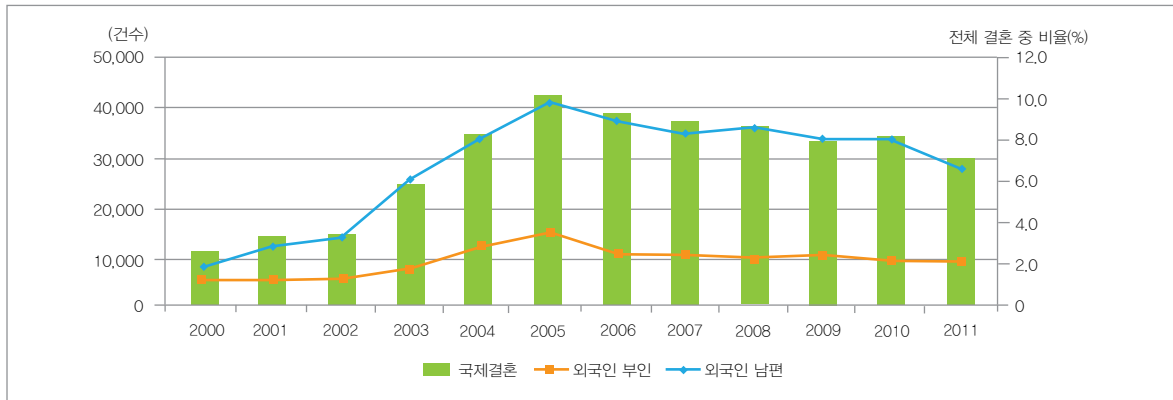
2. 혼인이주여성의 유입 현황 및 전망

-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2000년대에 들어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며, 도시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

○ 중국과의 교류 확대 및 국내 혼인시장의 변화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혼인이주자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특히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혼인이주자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한 이후 최근 수년 간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모습

-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여성/한국인 남성의 결혼은 그 반대의 경우보다 3.5배 정도 높은 수준
- 최근 국제결혼 건수는 경기변동 및 혼인적령기 인구의 감소 등 전체 혼인시장의 변화들을 반영
- 2011년 국제결혼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가장 낮음

[그림 1] 국내 국제결혼의 추세 변화(국제결혼 건수, 전체 혼인 중 국제결혼 비율)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각년도)

○ 국제결혼 초기 단계에서는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졌으나, 점차 도시지역 특히 중소도시 지역으로 외국인여성과의 국제결혼이 확산되는 추세

- 2000년에는 남편의 거주지 주소가 군단위 지역인 경우가 20.2%였으나 현재는 16.5%에 그친 반면, 중소도시인 경우는 45.5%에 이르고, 서울이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2003년 이후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
-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직업분포에서도 다시 확인되는데, 2011년 외국인여성과의 국제결혼에서 농림어업 숙련직에 종사하고 있는 내국인 남성 비율은 7.0%에 불과
- 이는 '한국 농촌에 시집 온 외국인 신부' 라는 일반적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현상으로, 도시지역의 다문화 가족은 농촌지역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질 가능성

<표 3> 국제결혼 내국인 남성의 거주지 분포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도시	41.6	46.9	45.6	47.4	47.2	45.3	41.2	41.0	41.0	40.1	39.6	37.9
중소도시	38.2	39.6	39.9	40.7	41.0	41.5	43.5	44.5	44.9	45.6	46.1	45.5
군단위	20.2	13.5	14.5	11.9	11.8	13.2	15.3	14.4	14.1	14.3	14.2	16.5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각년도)

■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 증가는 국내 혼인시장의 불균형이라는 인구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

○ 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출산아 수의 감소로 인하여 최근 혼인 적령기 인구는 역삼각형의 인구구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내의 나이가 남편보다 어린 우리의 혼인 문화에서 이러한 인구구조는 신부의 부족을 필연적으로 수반

- 여성의 결혼 연기와 독신의 증가 경향은 신부 수입에 대한 수요를 더욱 강화
- 국내 혼인시장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혼인압력(marriage squeezing)으로 인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신부수입에 대한 수요 발생
-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출생성비 불균형의 영향은 아직 혼인시장에 나타나지 않음

○ 결혼시장에서의 불균형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찾기가 힘든 집단에서 더욱 심각하여, 이들에게서 신부수입의 수요는 더욱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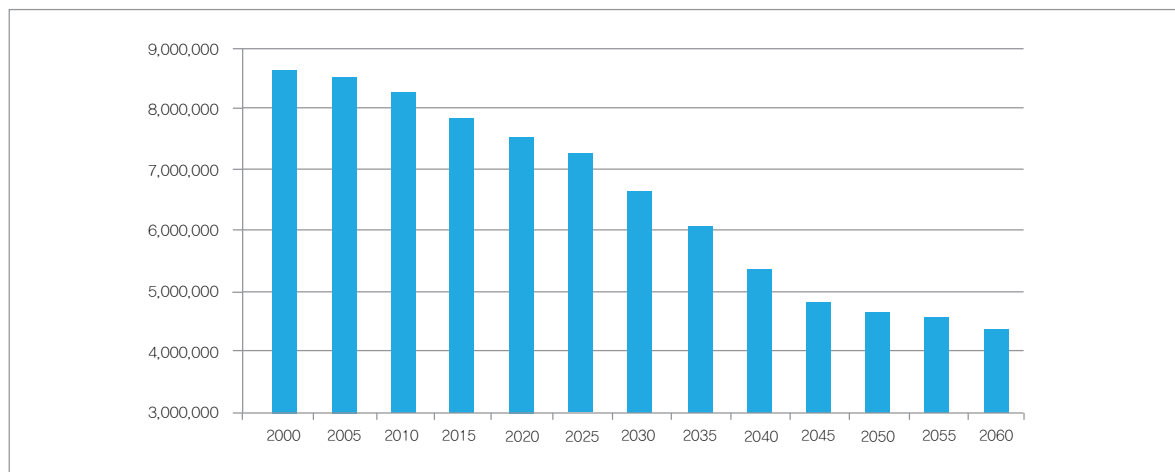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은 사회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처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혼인이주여성들은 빈곤 및 폭력 등 가족의 위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앞으로도 혼인이주여성의 유입은 계속되지만, 그 규모는 증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 과거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로, 가까운 미래에는 혼인적령기 남성 인구가 크게 감소

- 전체 혼인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국제결혼 건수도 감소

[그림 2] 장래 혼인기 적령기(25~44세) 남성 인구의 변화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1)

○ 저출산 현상 등 인구변천과정은 주요 신부 송출국인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특히 이들 국가는 높은 출생성비 불균형으로 인하여 혼인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송출국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으로의 혼인이주 유입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 주요 송출국들에서 인구변천에 따른 혼인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자국의 신부유출(bride drain)을 막는 국제결혼 규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음
- 특히 인구 규모가 매우 크고, 출생성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중국의 혼인시장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혼인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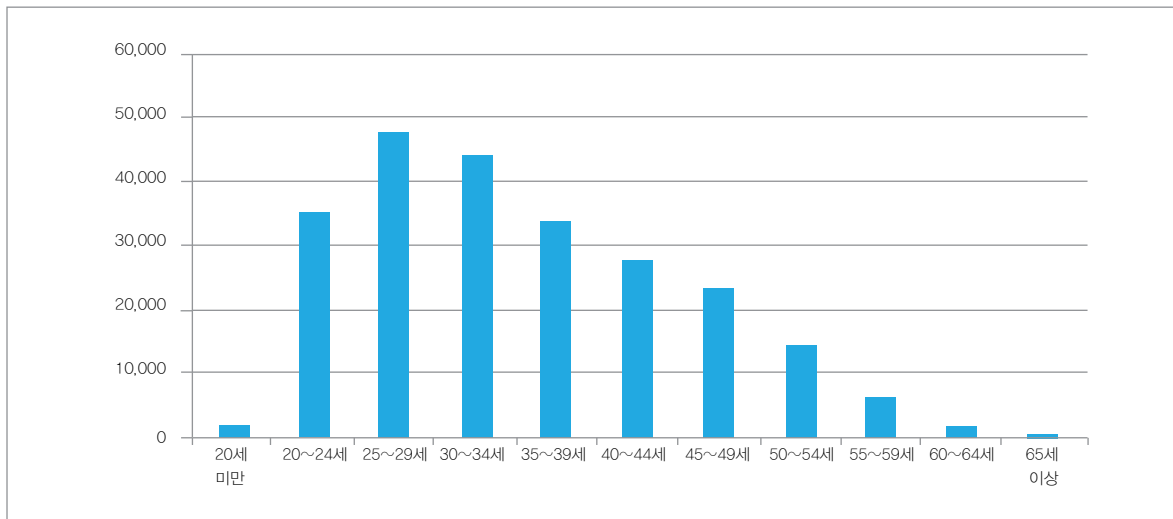
3. 혼인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특성 변화

- 우리사회의 국제결혼과 혼인이주여성의 유입 경향은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인구규모뿐만 아니라 그 특성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국내에 체류하는 혼인이주여성의 연령 분포는 점차 고령화되는 추세

- 이미 국내에 입국한 혼인이주여성들의 고령화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30대 이상 연령의 외국인 신부들의 혼인도 증가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결혼한 혼인이주여성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연령을 누적하여 추정하면, 만 35세 이상의 혼인이주여성들은 전체의 45.6%에 이를 것으로 추산
- 현재 체류 중인 전체 혼인이주여성들의 연령분포를 제시하는 통계는 부재한 상황임

[그림 3] 혼인이주여성들의 연령분포 추산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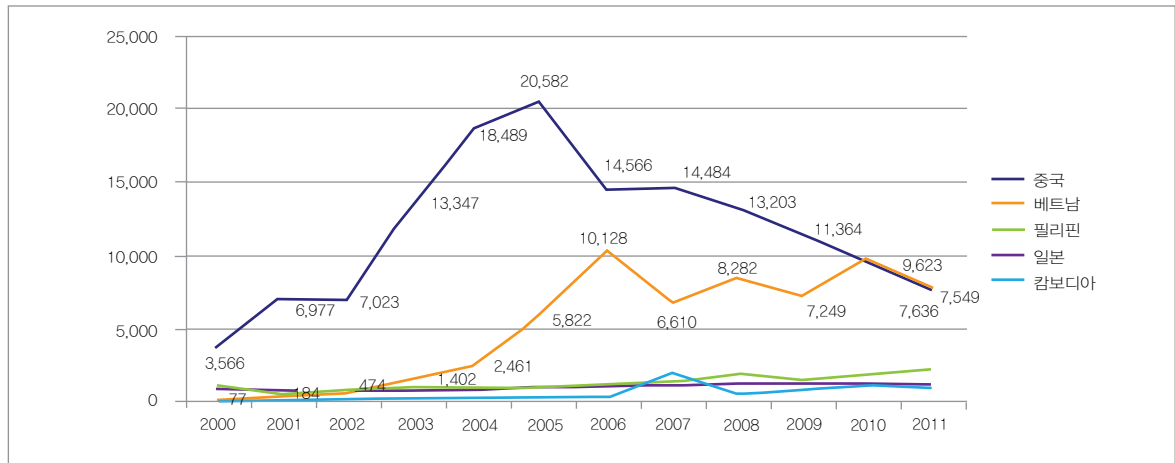
주: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혼인통계를 누적하여 국제결혼 외국인 신부들의 2011년 현재 연령분포를 추산 - 이혼, 출국, 사망 등의 퇴출 정보 불포함

- 혼인이주여성들의 출신지역의 분포 변화에 따라 혼인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의 다양성이 증가

○ 과거에는 중국 조선족 출신 혼인이주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 이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출신 여성들과의 결혼이 빠르게 증가

- 베트남 출신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은 2006년 정점에 이르렀으나, 국내에서 발생한 폭력 및 사망 사건 등에서 비롯된 베트남 정부의 국제결혼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잠시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
- 반면 중국 여성과의 혼인은 2005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지난 2011년에는 베트남 여성들과의 국제결혼 건수가 중국 여성들과의 결혼 건수를 추월

[그림 4] 혼인이주여성의 출신국적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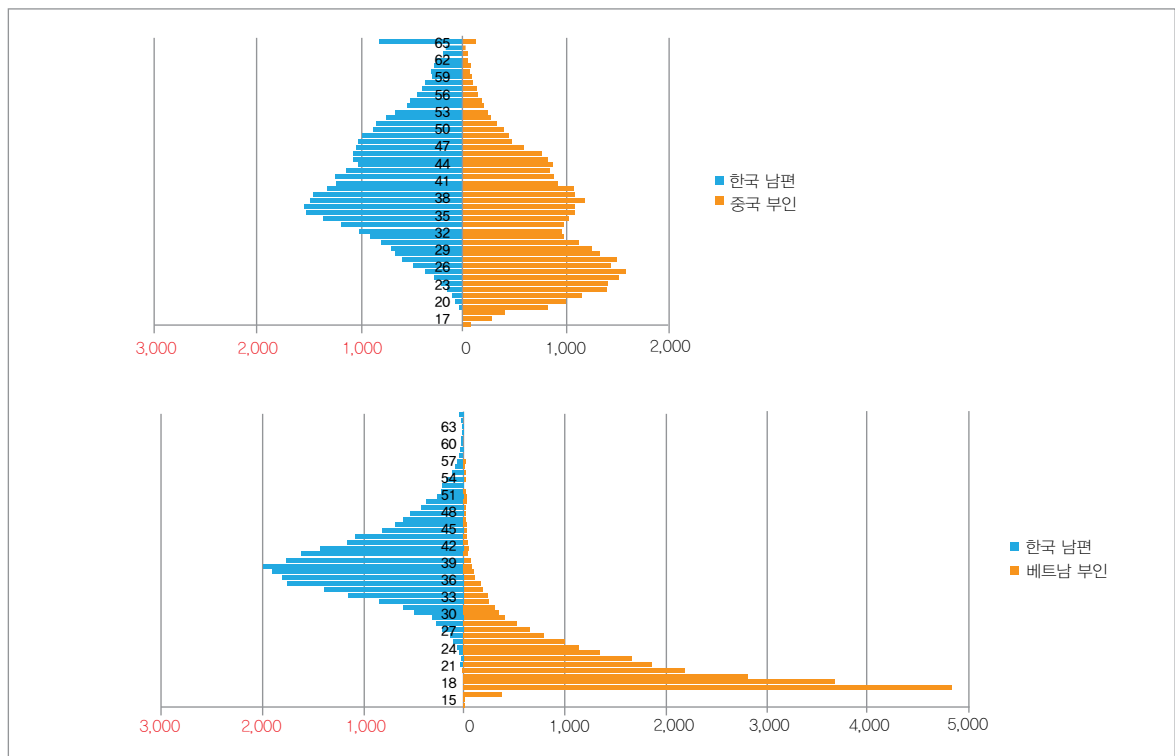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각년도)

○중국과 베트남 출신 여성들 사이에는 자신 및 남편의 연령 분포에서 다양한 차이가 존재

- 중국 여성과의 결혼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령이 베트남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20대 중반과 30대 후반 두 연령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들과 결혼한 남편도 30대 중반과 40대 중반에 집중 분포
- 반면 베트남 여성의 경우 20세 미만 연령대에 극단적으로 분포하는 형태를 보이며, 내국인 남편의 경우에는 39세를 전후하여 집중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매우 높은 부부 간 연령 차이를 나타냄

[그림 5] 국제결혼 부부간 연령분포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2008~2010)

○연령분포 이외에도 중국 출신 여성들과 베트남 출신 여성들 사이에는 거주지, 혼인의 종류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

- 베트남 출신 여성은 농촌에 거주하는 내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 2005년 이후부터 농촌에서는 베트남 출신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중국 출신을 넘어서고 있음
- 베트남 출신 여성과 결혼한 내국인 남성은 초혼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72.7%, 2010년), 중국 출신 여성과의 국제결혼에는 재혼의 비율이 더 높음(초혼 52.4%, 2010년)
- 상대적으로 젊은 부부 연령, 높은 초혼 비율, 농촌 거주 경향 등 베트남 출신 신부들의 특성은 이들의 출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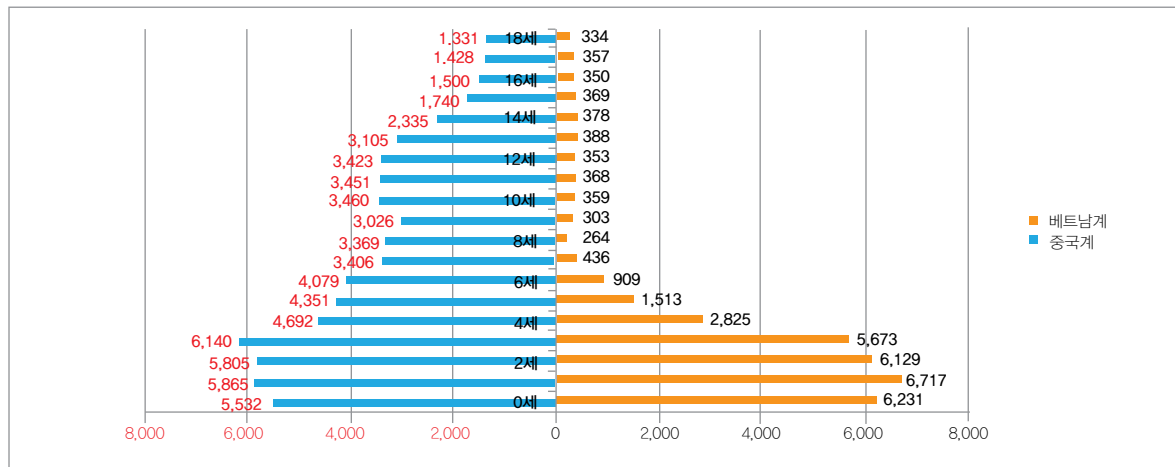
■ 국제결혼 여성의 출신지의 변화는 다시 다문화가족 자녀들 분포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

○과거에는 중국 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베트남 출신 혼인이주 여성의 증가에 따라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

○베트남 출신 신부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자녀들은 현재 학령기에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는 중국 출신 자녀들보다 더 많아질 것임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다문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언어 및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차이가 더 크다는 점에서 학교 적응과 관련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

[그림 6]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연령분포



자료: 행안부 외국인주민현황(2011)

주: 중국출신 자녀들의 경우에는 화교와 국제결혼 외 입국자들의 자녀들이 포함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초기적응 지원형 정책에서 정착자들을 대상의 중장기적 생활/자활 지원정책으로 전환 필요
 - 혼인이주여성의 유입 감소에 따라 앞으로 입국 초기 혼인이주자들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장기거주 혼인이주자의 비율은 증가할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다문화가족 정책 전환이 필요
 - 혼인이주여성의 유입은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들이 국내에 영구정착을 목적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혼인이주자들의 수는 누적적으로 증가
 - 현재와 같은 이주 초기 단계 이주자들에 초점을 맞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초기 이주과정을 지난 장기거주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들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
- 혼인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연령 증가 및 다양성 증가를 반영하는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
 - 중년 이상 연령층의 혼인이주자 및 이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만성질환형 보건지원 및 생계형 취업 훈련 등의 정책 수요
 - 남편과의 연령차이가 큰 경우 20여년 후에는 외국인 신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질적 취업교육이 필요
 - 보건, 취업훈련, 생계지원, 자녀 교육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복지정책과 혼인이주여성 지원을 통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다문화가족의 거주지역에 따라 도시지역형 프로그램과 농촌지역형 프로그램을 구분할 필요
-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다양성 증가에 대한 대응 마련
 - 혼인이주여성의 출신지 다변화에 따른 문화가족 자녀들의 특성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환경의 새로운 단계 진입을 의미하는 시급한 과제
 - 12세 미만의 아동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 사각지대를 낳을 위험성
 -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장기적 취업 대책과의 연계성 고민
 - 이주자 2세 문제로 심각한 사회갈등을 겪고 있는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지원은 사회통합의 목적
 - 서구사회에서 이주자와의 갈등은 이주자들보다는 그들의 자녀들인 이주자 1.5세대 및 이주자 2세들의 학업이탈, 실업 및 빈곤 문제와 연관
 - 이주자들과의 갈등 증가는 국가적 차원의 사회·정치적 갈등을 야기
 - 프랑스 파리의 이주자 폭동(2005), 호주 이주자 폭동(2005), 노르웨이 총격사건(2011) 등

집필자 | 이상림(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 | 02-380-8386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122-70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